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라는 제목의 작은 책이 있다. 미국의 페미니즘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가 인도 출신의 탈식민주의 이론가 가야트리 스피박과 나는 대답을 엮은 책이다. 제목의 ‘노래하는가?’는 은유적 표현만은 아니다. 버틀러가 대담 중에 ‘국가(國歌) 부르기’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비중 있는 토론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사례는 대답이 이루어지던 2006년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거주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부른 스페인어 가사의 미국 국가에 대한 것이다.

버틀러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우리의 국가’(Nuestro himno)로 불리는 스페인어 미국 국가의 등장은 민족의 복수성에 대해, 그리고 ‘우리’와 ‘우리 것’의 의미에 대해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국가는 누구에게 속하는 걸까요?” 미국과 같은 명시적 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 이러한 물음은 주류인 ‘백인 앵글로색슨 기독교도’(WASP) 중심의 민족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버틀러가 제시한 사례와 그에 따른 물음은 단

누가 국가를 노래하는가

일민족 신화가 여전히 강고한 한국 사회에서는 실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된 ‘애국가’를 부르며 권리 투쟁을 하는 ‘불법’ 거주자들을 한국 내에서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최근 한국계 미국인의 삶과 기억을 다룬 영화 ‘미나리’조차 미국 내 소수민족 이주민 서사에 주목하기보다는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 등을 둘러싼 ‘한국적 자부심’으로 고양되는 게 한국적 현실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국가나 민족 개념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구체화된 사회정치적 맥락을 얻기 어렵다. 소수민족이나 이주민이 아니라면 이들을 대신하여 다른 어떤 집단이 한국 내에서 민족주의 비판을 수행할 수 있을까? 버틀러의 물음에 상응하여 제시할 만한(사실상 더 급진적인) 한국의 사례가 있다. 41년 전 옛 전남 도청 앞에서 광주 시민들이 부른 ‘애국가’다. 버틀러 식으로 물음을 던져 보자. ‘폭도’로 매도된 이들이 부른 국가,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국가 부르기’는 위로부터의 국민 동원과 통제 의의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권리 주장이나 전유, 나아가 점거의 의미도 만들어 낼 수 있다. 5·18 당시의 애국가 부르는 버틀러가 예로 든 스페인어 미국 국가와도 유사한 수행적 의미를 형성해 냈다.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자주 불렀던 또 다른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함께 이들이 부른 ‘애국가’는 민족의 복수성에 대해 그리고 ‘우리’와 ‘우리 것’의 의미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광주’를 특수화 내지 특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 지역 담론이 부여받은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이다. 즉 한국 내 ‘지역(들)’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나아가 어느 특정 위치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모든 ‘중심주의(서양 중심주의, 수도권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 등)’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요컨대 한국에서 지역과 지역 담론은 명시적 다민족 사회의 이주민이나 소수민족의 저항 담론 그리고 젠더 담론과도 만나는 지점이 있다. 이를 ‘비판적 지역 담론’ 혹은 ‘비판적 지역학’이라고 이름 붙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버틀러의 물음에 화답하여 스피박이 ‘비판적 지역주의’를 제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민족과 국가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의 맥락에서 지역적 공동체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이에 맞게 국가의 기능을 재조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뜻한다.

광주와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국가를 노래하는가?’라는 물음은 세상 다의적(多意的)이며, 사실상 다양한 목소리가 교차하는 다성적(多聲的) 물음이 된다. 민족과 국가는 이러한 다성화된 지역적 목소리들에 응답할 때에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41주년을 맞은 5·18에 대한 기억과 ‘비판적 지역 담론’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만 2년간의 고정 칼럼 집필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社說

‘재탕 삼탕’ 광주시 청소년 정책 실망스럽다

광주시가 최근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 기존 정책을 적당히 짜깁기하거나 재탕하는 수준이어서 청년들을 실망시켰다. 그나마 주요 정책이라며 내놓은 사업의 예산도 아주 빈약해 그저 생색을 내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역 청년단체들은 “청년을 정책 홍보의 들러리로 취급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6대 분야 15개 지원 사업을 담은 ‘청년 희망+’ 및 ‘청소년 희망+’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3~7일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년·청소년 특별 주간으로 지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물이라 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인 데다 신규 사업으로 발표한 일부 사업마저도 이미 계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광주시가 이날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 사회안전 지원 사업인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은 이미 지난해 확정돼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로 내놓은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과 청년 정책실현실, 청년기자단, 찾아가는 청년정책 등의 사업도 이미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시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돕겠다며 발표한 주요 사업 역시 코로나와 별개로 예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예산도 최저 2000만 원에서 1억 원 안팎으로, 42만 명에 이르는 광주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게다가 더욱 문제는 청년들이 광주시와 청년정책 자문단 회의 등을 갖고 일일협의체 사업 등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에 따른 청년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며 건의한 지원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쯤 되면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정책에 반영하겠다던 애초 광주시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광주시는 정책 간담회나 각종 회의에 유익행위로 여기는 구태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애로를 제대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연휴 낀 5·18주간 방역의식 다시 가다듬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고 있다. 여기에 이번 주는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가 끼여 있어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 10일 24명을 기록한 이후 일주일째 두 자릿수의 신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지역은 더욱 심각해 지난 13일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신규 확진자가 하루 발생 건수로 역대 최다인 50명에 달했다. 이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 모임이 크게 늘어난 데다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면서 유흥업소와 학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을 특별방역주간으로 선포했다. 이 기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독서실 등의 영입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 이후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5·18 기념행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와 국가보훈처는 올해 5·18 국가 기념식은 참석 인원을 99명 이내로 축소하는 대신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기념행사가 대폭 축소되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다. 따라서 전국에서 참배객들이 광주를 찾게 되는 이번 주에는 특히 안전하게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기고

국민 건강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정광숙 전남도간호사회 회장

전남도내 병원들은 간호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전남 지역에 간호대학이 없어 간호사를 배출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10년 전보다 간호대학은 5곳이 더 늘어나 14개 대학에서 매년 1500여 명이 배출된다. 하지만 신규 간호사들은 대도시나 규모가 큰 병원으로 떠난다. 근무 여건이 훨씬 좋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규 간호사 10명 중 7명이 광주나 타 지역에 취업을 한다.

그러다 보니 간호대학 졸업생 수만 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일곱 번째로 많지만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사 수는 4.8명에 불과하다. 도내 시군을 놓고 보면 지역별 차이는 더욱 심각하다.

유일하게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화순군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16명이지만, 진도군은 1.3명으로 1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도내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12개 지역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3명도 채 안 된다.

적정한 간호사의 배치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많을수록 환자의 사망률도 증가한다.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 시간이 많을수록 환자의 재입원률은 줄어든다. 간호사 배치 수준이 높을수록 수술 후 감염 등의 발생률도 낮아진다.

한마디로 적정 수준의 간호사가 병원에 배치돼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환자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일본 등 세계 90여 개국은 간호 인력이 국가 보건 의료 체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보건 의료 전문가 자원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간호법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간호사의 역할이 재인식되면서 현재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추진 중이다. 간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하고 반길 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했다. 이들 3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들은 모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9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이들 간호법안 내용 중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을 두고 면허제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도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업무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만이 진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듯이, 간호법안에서도 의료인인 간호사가 간호 업무를 하도록 규정한 것을 놓고 보면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행위가 가능할 것이라 주장한다. 간호법안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하도록 하고 있어 간호사가 단독적인 진료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 배치되지 않음에도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경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법을 새로 만들기에 앞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누구라도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제정으로 인해 발생되지 않을 일들을 실제 발생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간호 업무 영역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화됐다. 이로 인해 간호 관련 법안들도 11개 부처 90여 개에 달한다. 이번 간호법 제정은 이들 법안을 하나로 묶어 일관성 있는 간호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기고

지방 소멸과 지방대의 미래



박안수 말뚝이카데미 원장·경제학박사

전라남도 인구는 185만 명 정도로 농어촌 지역 군(郡)의 절반 이상은 인구가 5만이 채 안 된다. 이런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전남 지역 대도시 시군이 지방 소멸 우려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작금의 경제지표나 경쟁력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도 각 시군에서는 ‘농어촌에서 한 달 살아 보기’와 주소갖기 등 귀농귀촌 정책을 펴고 있다.

장성·해남·장흥군 등에서 귀농귀촌센터를 설치하고 인구 유입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지리산과 섬진강을 접하고 있는 경남 하동군은 ‘귀농귀촌1번지’ 시책을 적극 펼친 덕분에 지역사회가 활력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시책을 참고했으면 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기업체 유치 등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특단의 정책들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에는 약재이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점차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인경(서울·인천·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남도와 영남에 소재한 대학들이 신입생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실제 지난 3월 광주 지역 4년제 주요 대학들에서는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전남대 광주 용봉캠퍼스의 경우 83개 학과 중 사범대학 일부 등 4개 학과가 정원에 미달했다. 조선대는 총 76개 학과 중 42.1%인 32개 학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호남대는 총 40개 학과 중 절반 가량인 18개 학과가 미달했다.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여파지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부산과 강원 지역에서 국립대 통합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그 파장의 하나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S대학교 신입생 4%가 의대와 치대 재입학을 위해 자퇴를 하였고, 일부

국립 대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의 신입생 6%가 1년 이내에 자퇴했다. 이는 졸업생들이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전과(轉科)를 하거나 취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대학으로 재입학을 선택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납부금 등 다양한 면에서 유리한 국립대가 이렇진대 지역 사립대의 경우 더욱 심각하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방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17개 지역 대학들이 엮인 광주대학발전협력단을 출범시켰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일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기업들과 산학협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대학 출신 채용 비율도 더욱 높여야 한다.

대학들도 평생 학습의 장을 확대하고 중국 등 외국 학생 유치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의 우수한 학령 인구가 역외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희망해 본다. 내년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지역 내 기존 공과대학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허기진 개 앞에 먹이가 놓여 있다. 하지만 개와 먹이 사이엔 길고 높은 철망이 있다. 개는 철망을 넘어갈 수도, 철망을 뚫을 수도 없다. 배고픈 개는 어떻게 했을까. 먹이를 본 개는 철망에 몇 번 머리를 부딪쳐 보다가 문득 멈춘다. 그리고 한 동안 멍한 자세로 있더니 곧바로 철망을 빙 돌아가 먹이를 먹는다.”

독일 심리학자 볼프강 쾰러(1887~1967)가 설명하는 ‘통찰’의 과정이다.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거쳐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또는 직관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방식이 통찰이다. 통찰은 많은 막론하고 통찰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꼽혀 왔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지도자라면 국내는 물론 주변 국가의 복잡한 갈등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풍부한 경험과 올바른 사색으로 녹여 내 대처를 줄이거나 분쟁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찰은 주관적인 느낌이 강하다. 한 개인이 오감을 통해 평생 동안 보고 듣고 느끼며 쌓아 온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독서 등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습

득한 지식 등이 통찰의 방향이나 종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이 통찰의 한계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통찰만으로는 ‘더 큰 문제-빅 퀘스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대통령에 필요한 덕목’을 질문받은 문 대통령은 “시대정신과 함께 해야 한다”면서도 “옛날엔(시대정신을) 개인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보다는 공감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 또 “결국은 국민의 집단적성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과 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대정신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개인적인 통찰력보다는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 나라의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개인적인 통찰의 한계를 토로하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의 덕목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홍해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